끊이지 않는 이명박 부동산 의혹

“시장 재직때 서초동 건물 고도제한 완화”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비리 검증 파장이 확산 일로를 치닫고 있다. 2일 이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3일에는 이 전 시장 재직시절의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이 터졌다.

◇제기된 의혹=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안 1709-4번지(지상 5층, 연면적 5천7백92㎡)와 1717-1번지(지상 2층, 연면적 897㎡)의 이 전 시장 소유의 건물 두 채는 1980년대 초 법원·검찰청 건설이 예정되면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5층 18m 이하로 건물 높이가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4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정비계획안’을 서초구에 내려 보냈으며 이 전 시장이 임기를 마친 닷새 뒤인 2006년 7월 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고도가 7층 28m로 완화됐다. 서울시에서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검토한 지역은 서초 법조단지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경복궁 주변, 어린이대공원 주변 등 8곳이었으나 실제로 규제가 완화된 곳은 법조단지 한 곳뿐이었다.

또 이 전 시장이 시장 재임시 개발사업을 추진한 은평 뉴타운 2지구에는 이 전 시장과 그의 형제 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은평구 진관외동 287-3 일대 538㎡와 288-12 일대 205㎡로, 이 땅은 2005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자인 SH공사에 수용되기 전 이 전 시장의 큰형인 이상은(74)씨와 큰누나(77), 여동생(62), 조카(41·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아들) 등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었다.

특히 이 전 시장과 작은형인 이 부의장도 이 땅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이 지분은 1993년 국회의원이었던 두 사람이 국회에 재산신고를 하기 직전 제3자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조카에게 돌아온 뒤 SH공사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1971년부터 30여 년 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가 이 전 시장이 취임(2002년 7월)한 지 석 달 만에 발표한 ‘신시가지형 시범 뉴타운’ 대상지에 포함됐으며 이후 땅값이 크게 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캠프측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평 뉴타운에 친척 소유 땅 포함도

朴측 “권력형 비리… 李가 소명해야”

◇강화되는 공세=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이날 이 전 시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이날 공세에는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홍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 후보의 시장 재직시 벌어졌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이 후보가 직접 소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주장한 ‘이 전 시장 전 재산헌납설’을 거듭 강조하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이 후보는 빠른 시일 내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캠프의 서청원 상임고문도 이날 이 전 시장이 자신의 형과 처남 명의로 돼 있다 포스코로 넘어간 도곡동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고문은 이날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형님과 처남이 도곡동에 1천983평의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후보가) 국회의원 재임시절인 93년 또는 94년 포철회장을 3번이나 찾아가 이 땅을 ‘내 땅인데 포철이 사주십시오’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대선출마 기자회견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중도 정치로 국민통합 이루겠다”

정동영 전 의장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3일 “중산층의 시대, 중소기업 강국, 중용의 정치를 통해 중통령의 시대를 맞는 신중도정치로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가진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한나라당과 같은 과거 세력으로 미래로 갈 수 없다며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포용과 통합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열매를 따고 국민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통합의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만능주의와 신우파 정치로는 통합을 이룰 수 없고 전통적 좌파도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생산과 복지가 상생하는 신중도 정치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새 시대를 여는 신중도의 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나는) 독재정권 대통령의 딸도 아니고 대기업의 이권과 정보를 이용해 수천억의 재산을 축적한 사업가도 아니다”면서 “삽질로 운하를 파자는 주장은 미래전략이 될 수 없으며 21세기의 주역은 토목공사 시대의 주역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전 65%에 달했다가 10년 만에 50%대로 내려앉은 중산층을 임기 5년 내에 70%로 끌어올리겠다”면서 “대륙으로, 우주로 뻗어나가기 위해 5공 정권 때 사실상 포기한 항공우주산업을 21세기 꿈의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까지 한국인을 달나라로 보내는 ‘2025년 드림스페이스 프로젝트’ ▲남북·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개최 및 2020년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동북아평화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유망 중소기업 상속세 탕감 등의 세부공약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당 정세균 의장 장영달 원내대표를 비롯해 탈당파, 통합민주당 등 범여권 현역의원 70여명을 포함, 정치권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권력형 음해 21C 일류국가선 안돼”

李, 검증 공세 ‘정권배후설’ 부각 주력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포럼·한국엔지니어클럽 공동초청 강연에서 “최근 (검증과 관련해) 나오는 것을 보면 일반 국민으로서는 접할 수 없는 정보이다. 과연 어느 손에서 나오겠느냐”면서 “권력형 음해는 21세기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 캠프에서도 특정 개인의 주소지 이전이나 벌과금 납부자료, 부동산 거래내역 등은 국가권력기관이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료들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권배후설’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캠프는 또 고도제한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이었다”면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적법하게 추진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캠프는 이와 함께 이 전 시장 일가 땅이 은평뉴타운에 포함된 것과 관련 “이 전 시장 부친이 76년 매입해 82년에 5명의 자식에게 상속을 해 준 재산”이라고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두언·곽성문 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

한나라 윤리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3일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 정두언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 측 곽성문 의원에 대해 각각 6개월간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곽성문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소명을 들었으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하시킨 데 대해 잘못했다는 점을 두 사람 모두 시인했다”며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아울러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위를 캠프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라며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윤리위에서 더 엄격한 징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리관인 박세환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당헌에 따른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전부 정지되고 지구당위원장의 경우 사고당으로 지정된다”며 “징계수위를 정함에 있어 제명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정지 기간을 경선까지만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격론을 벌인 끝에 근소한 차로 6개월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혁규 등 우리당 5명

한, 검찰에 수사 의뢰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3일 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친·인척들의 금융사기 연루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의원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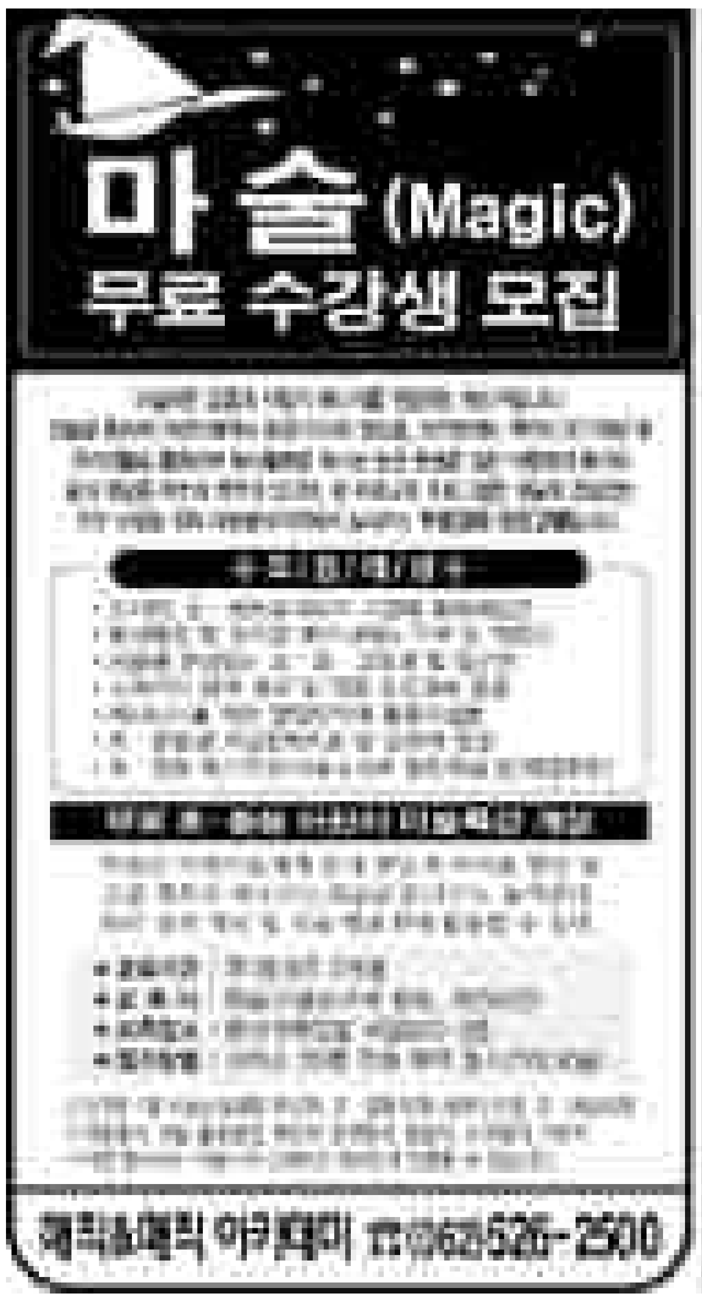
투쟁위가 대검찰청 중수부에 수사의뢰한 우리당 의원 5명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BBK투자자문의 금융사기 사건에 이 전 시장이 연루됐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송영길·박영선·김재윤 의원과 이 전 시장 부인의 위장전입 및 부동산투기 혐의를 주장한 김혁규·김종률 의원이다. . /연합뉴스

우리당 탈당그룹 5인 지도부 구성

열린우리당 탈당의원 43명의 모임인 ‘대통합 추진모임’은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근태 김덕규 문희상 이미경 의원, 정대철 전 우리당 고문으로 구성된 5인의 지도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노웅래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단 5인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정대철 고문이 잠정적으로 추진모임의 대표를 맡기로 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탈당의원들은 분열하지 않고 행동통일을 해 대통합신당을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합 추진모임은 이에 따라 지도부 구성과 더불어 내부에 기획팀을 둬 대통합 신당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5일 오후 국회에서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우리당 탈당그룹이 별도의 지도부를 구성한 것은 열린우리당과 중도통합민주당을 압박해 대선후보자 중심의 통합논의와 맞물려 세력통합을 촉발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웅래 의원은 “이달 20~25일까지는 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작은 차이를 줄이고 공통분모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